



[해설]  
포스코 10일 조업정지  
노사 한목소리 반발  
03



Economy

코스피 2111.81 (+12.32)	코스닥 728.79 (+7.65)
금리 (미국 3년) 1.54 (+0.01)	환율 (원/달러) 1180.40 (-4.80) (11일)

# 무역전쟁 중인데... 기업 발목만 잡는 정부

현대차·LG, 공정위 단속에 위축  
삼성, 경영진·CEO 수사에 발목  
정부, 무역분쟁 실질대책은 전무



중국 상하이 난징동루에 있는 화웨이 매장. 난징동루는 중국의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에서도 최대 변화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연합뉴스

재계가 미중 무역분쟁발 태풍에 몸을 잔뜩 움추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불안감도 더 커졌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무역 분쟁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받았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 중지를, 중국은 거래 유지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화웨이와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목한데 이은 조치다.

실제 피해도 가시화됐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혼조세로 돌아서면서 2분기 시장 회복 가능성도 급감했다. 가전 등 업종 역시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이렇다할 실적

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일단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정부가 손을 놓은 게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 수석은 최근 브리핑에서 화웨이 사태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책임을 기업에 돌렸다.

정부가 사실상 경제 외교 활동을 포기한 셈이다. 올 초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며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던 것과는 달리, 비공식적으로도 기업들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섰지만, 한국은행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수습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실리를 위해서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긴 하지만, 정부는 태도중립이라기 보다 태도부재에 더 가깝다. 어찌 보면 무책임하다"며 "투자자 일자리 확충을 부탁하며 손을 내밀더니, 정작 기업이 어려워질 때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 기업상속 지원세제 강화 방안

현행	개정
기업상속공제 적용받는 경우 상속인 대비 낮은 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 가능	불성실 경영행위(탈세·회계부정) 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배제하여 지원제도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	10년 → 7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범위 확대	소분류 내 변경 허용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유지 의무 완화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업종변경에 따라 대체취득 필요한 경우,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유지 의무 완화	중견기업 의무 완화 중견기업 사후관리기간 통상 고용유지 의무 기준인원 120% → 100%
불성실 기업인 기업상속공제 배제	상속인·피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 경영 관련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일정규모 이상 탈세·회계부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 배제·사후 추징

뉴스

## 당정, 기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

# 알맹이 속빠진 개편 공제대상 확대 없어

사후관리기간 줄이고 업종 확대  
무늬만 개편... 체감 미지수 지적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자녀 등에 가업을 상속할 경우 업종, 자산,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규제의 족쇄는 풀렸지만, 공제 대상은 유지해 사실상 무늬만 개편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본지 6월11일자 1면 참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기업의 고용·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해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도다.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이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준다. 다만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사후관리기간을 줄이고, 주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대분류로 넓히기로 했다. 업종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자산 매각의 경우 일부 예외도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공제대상에 대해서도 현행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기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국회에 (기업상속공제에 대한) 다수 의원 입법안이 올라와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기준 금액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유지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보수권과 재계 일각에선 기업이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 체감할지 미지수라는 주장이 나온다. 상속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업종 변경의 경우에도 정부가 대분류 범위에서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어 사실상 무늬만 바꿨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상속공제 시 매출액과 지분보유 요건 자체가 없다. 또 피상속인이 5년만 경영해도 공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2014년 기업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이미 2만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은 2012년 58곳, 2013년 70곳, 2014년 68곳, 2015년 67곳, 2016년 76곳, 2017년 75곳에 머물렀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내에서도 규제 완화 대상 확대를 원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 매출액 기준은 국회에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20대 국회 의안분석 결과, 지난 2일 기준 여야가 올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중 3건은 민주당, 나머지 10건은 한국당에서 나왔다. 중소기업도 '명문상수기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여전히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3건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규제 관련 의견은 분분하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현화하는 아들 김홍업 전 의원

고 이희호 여사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 및 유가족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현화 하고 있다. (관련기사 L3) /손진영 기자 son@

## 6월 수출 17% 감소... 반도체 31% 뚝

1~10일 수출 103억 달러 기록  
반도체·중국 수출 부진 지속

6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7년만의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인 반도체 수출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 진단·전망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0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16.6%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고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약 17억1000만달러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번달에도 상승세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품목별로 반도체(-30.8%), 석유제품(-20.1%), 승용차(-0.7%), 무선통신기기(-5.9%) 등이 감소했고 가전제품(68.1%), 선박(169.7%) 등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16.5%)는 증가했으나 중국(-26.7%), 미국(-7.6%), 베트남(-1.2%), 유럽연합(EU)(-17.0%), 일본(-20.3%), 중동(-17.6%) 등은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은 12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18.1%), 석유제품(2.1%), 정밀기기(1.7%) 등은 늘어났지만 원유(-23.8%), 가스(-40.4%), 반도체 제조용 장비(-41.1%)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 중국(6.7%), 호주(19.2%), 베트남(9.7%) 등은 증가했고 중동(-41.6%), 미국(-6.2%), EU(-8.

7%), 일본(-17.3%) 등은 감소했다.

한편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감소다. 4월 수출은 48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2% 줄었다. 수출 감소는 반짝 현상이 아니라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단가 하락, 세계 교역량 부진이 주 원인이다.

향후 경상수지 기조도 밝지 않다. 경상수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상품수지 흑자가 만만찮게 감소하는 추세여서 경상수지 기조를 낙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4월 상품수지 흑자는 56억7000달러로 지난해 4월의 96억2000만 달러와 비교해 41%나 줄었다.

/석대성 기자